

사설

구성원 참여 위축시킨 '비공개 원칙'

사립대학 총장 선임은 사립학교 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다. 대학 총장 선임 권한은 법인 이사회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인은 지난 16대 총장을 구성원과 함께 마련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선임했다. 구성원이 총장 선임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총장 선임 과정에서 경험한 전향적인 제도는 이번 선임 과정에서 보여진 '비공개 원칙' 등에 의해 후퇴한 듯하다.

지난해 10월 구성원 대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법인과 총장 선임 과정에 관한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초빙·공모, 후보자 추천, 속의·자문, 후보 선정, 심의·의결, 임용으로 이뤄진 선임제의 큰 틀에 머물렀다.

이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권한으로 돌아갔다. 큰 틀 못지

않게 세부적인 규칙 역시 참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관하다시피한 구성원 단체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초빙·공모 단계부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 단계를 통해 총장 후보에 오른 인원은 17명뿐이었다.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압축할 수 있는 후보자 최대 인원이 25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총장 후보가 시작부터 17명이었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공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생각해볼 지점이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구성원은 자신을 대신해 총장 후보자를 압축할 권한을 갖고 있던 총장후보자추천위원을 뽑을 기회를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총장 선임이 진행됐다. 17명 총장

후보 명단과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도 알 수 없었다.

세척에 등장한 속의 위원들의 자격 조건으로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최종 5인을 압축하게 됐음에도 비공개 원칙으로 구성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수도 없었다. 구성원의 선임과정에 대한 참여 수준이 기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간선제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법인은 '후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원칙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종 후보가 가려진 시점에서조차 그들의 포부나 대학 운영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구성원은 접근할 길이 없었다. 비공개 원칙의 선한 목적을 이해 못할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참여 수준이 극도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 사이에서라도 최선의 방안을 만들 필요는 차이를 위한 숙제로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다.

제16대 총장 선임부터 시작된 '구성원 참여'는 구성원이 총장 선임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세척을 전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약화시켰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임제를 도입한 취지, 그리고 선임과정 공개로 얻는 공익을 고려했을 때 '후보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라는 원칙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

이번 선임과정이 지나치게 조용했던 이유는 구성원의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 자체를 차단당한 제도적인 요인이 더 크다. 구성원의 목소리는 경청할 만하다. 법인과 구성원 단체는 애초 취지를 바탕으로 차기 총장 선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진심으로 다가서길 기대한다.

세시봉

펜 뒤의 칼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제목만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기사의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 L 씨의 성별, 데뷔 연도 및 작품 등을 기사에 써 알 만한 사람은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L 씨가 유명 연예인 이선균 씨라고 알려지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반복되는 논란에 결국 이 씨는 생을 마감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보도가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한 언론은 이 씨와 유흥업소 직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사건은 사생활 문제로 바뀌어 갔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은 마약 투약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대중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유명 연예인에게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유명 연예인에 낙인을 찍어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안타까운 마지막을 끝으로 사건은 종료됐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언론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여전히 여러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연예인들을 화제거리로 삼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이 주를 이루거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정작 이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보도가 과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도였는지는 의문이다. 조화수에 급급한 나머지 선정성과 상업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성의하고 부실한 취재, 특종 심리와 지나친 경쟁으로 자극적인 뉴스가 주류가 돼버린 현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입은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정부와 언론 기관 나눌 것 없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도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현대 뉴스는 단순히 독자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재 생산과 유통을 반복하기에 언론 기관의 신중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바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개정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경종으로 삼아야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자율적 혁신'이라는 취지 아래 학령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거론되는 '대학'은 주로 지방 사립대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학생모집과 재정이 탄탄한 우리학교와는 먼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경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입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변화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저출생 심화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그런 순간마다 융통성 있는 방안을 정부와 대학에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에서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완화된 개정안의 기준만을 충족한 뒤 남은 토지와 건물을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초빙·겸임교수 활용 증가로 비전임교수의 강의 비율이 늘어 강의의 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교육부는 비대면 강의 확대를 고려해 교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 기존만큼의 강의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팬데믹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런 의도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비대면 강의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강의라는 평이 학생 사이에서 지배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의 취지는 비대면 강의 확대로 학생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방안을 수시로 제시해도 항상 다른 곳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점과 우려가 등장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행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만평 교육부의 급한 불 끄기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